



# 보도자료

책임자 조영현 실장(금융제도연구실, 3775-9032)  
 작성자 조영현 연구위원(3775-9032)  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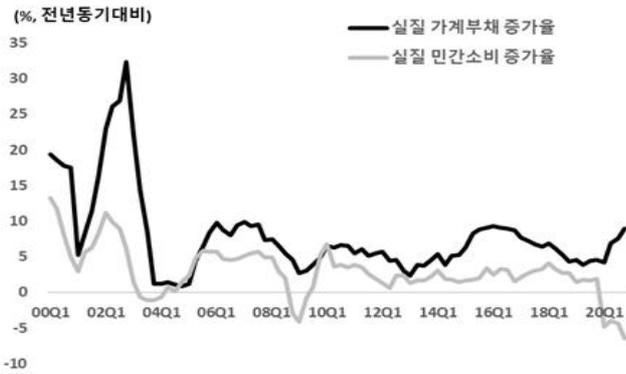
보도 2021. 10. 14(목) 조간부터  
 배포 2021. 10. 13(수)  
 매수 총 3매

## 보험연구원, 『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』 CEO Report 발간

“**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이 변화시킬 자금흐름과 자산리스크에 주목하여  
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**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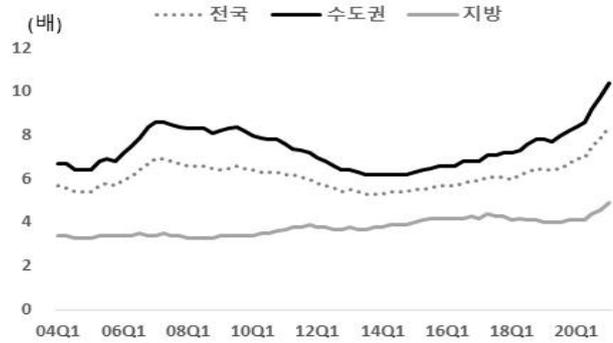
-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(금융제도연구실 실장)은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금융 불균형 완화 정책으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,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『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코로나19 이후 금융환경) 전례 없는 과감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금융안정성은 높아졌으나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, 가계와 기업의 예비성 단기 자금 수요 확대로 자금흐름이 단기화되었음
  - 금융불균형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하며, 이것이 심화되면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 잠재력 및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
  -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자산 가격이 모두 급등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형성한 상황이며, 민간신용도 급증하여 명목GDP 대비 210%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임
  - 시중 자금은 장기 유동성(M2) 보다 단기 유동성(M1)이 더 크게 증가함

<그림 1> 가계부채 및 민간소비 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

<그림 2>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(PIR)



자료: 한국은행

- (금융불균형 상태 평가) 현 수준의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 충격이 있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, 금융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
  -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, 현 수준의 금융불균형 상태에서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충분히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임
- (금융불균형 완화 정책)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, 한국은행도 금융불균형 완화에 비중을 두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
  - 금융불균형 문제 이외에도 2%대 중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,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, 고용증가,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 증가,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음
- (금융환경 전망)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,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,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
  - 통화정책 정상화 및 대출 제약으로 인해 개인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매입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, 이에 주가와 부동산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
  - 유동성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보이나, 예비적 수요의 단기 자금 중 일부는 장기

자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

- 아울러 위험자산 선호 하락으로 인한 회사채 금리 상승(신용스프레드 확대),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연체율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
- (장기금리 전망)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, 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
  -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, 장기 안전자산 수요 확대 등으로 장기 금리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
- (보험회사의 대응전략) 불균형 완화 정책은 자금흐름과 자산의 가격 및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보험회사는 저축성 및 투자성 보험의 수요, 자산운용 및 자본관리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 - 저축성보험 수요는 변화가 미미하고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, 대출 제약에 의해 해지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
  - 기대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근 수년간 확대했던 운용자산의 신용리스크를 축소시키고,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해 나아갈 시기로 보임
  - 가계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의 리스크를, 기업 대출의 경우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
  -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응하여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함
  - 금리 상승에 의해 RBC비율 하락이 예상되며,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

첨부: CEO Report 『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